초강력 레이저센터 등 유치 연구개발 기반 구축 급선무

특별법 통과 한전공대 내년 개교

고교 연계 수업 ·지역인재 선발 배려 지역 상생·공동발전 방안 등 모색 한전공대, 산학연 도약 기회 삼아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률안(한전공대 특별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범정부차원 에서 한전공대와 전남의 동반 성장을 위한 큰 그림 을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캠퍼스 인근에 초강력 레이저센터 등 대형 연구시설을 구축해 한전공대를 비롯한 지역 산·학·연의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면 서 지역 고교 연계 수업,신입생 선발 과정에서의 지 역 인재 배려 등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와 함께 나주시와 전남도가 한전공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는 만큼 한전공대의 성과가 전남 전

반에 고루 미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날 한전공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정 부는 곧이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시행 령 제정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법률 및 시행령 제 정으로 한전공대는 당초 목표로 했던 내년 3월 정 상 개교가 가능해지게 된다. 현행법 체제에서 교사 (校舍・학교건물) 준공 지연에 따라 학교 설립 절차 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선결 과제였다. 특별법에는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 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 지원 근거 도 담겨있다.

본회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면 한전공대 측은 5 월 3일 입학전형을 발표하며 신입생 선발과 캠퍼스 착공에 나서는 등 대학 설립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

촉박한 일정과 국민의힘의 반발로 한때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2022년 3월 대학 개교'가 현실화 되면서 지역에선 한전공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

우선 대형 연구시설을 조속히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전공대, 광주과기원(GIST)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해 대학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동 시에 호남권 미래산업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 이다. 거론되는 대형 연구시설은 초강력 레이저센 터, 방사광가속기 등이다. 초강력 레이저센터는 초 고출력(100PW, P=1015), 고에너지(20kJ, k= 103) 레이저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과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을 유도할 대형 연구시설이다.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반도체・광학소자・나노부품 초미세 가 공, 우주·항공용 금속 개발, 레이저 무기 및 의료기 술 장비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가 첨단 과학기술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필수 시설

김민준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담당은 "초강력 레 이저센터 등 대형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한국 에너지공대는 물론 지역 산학연 모두에 시너지 효 과를 낼 것"이라며 "호남권 미래산업 창출과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대형 연구시설 유치가 절실

전남도는 최근 나주시, 한전공대, 광주과기원, 레이저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초강력 레이저센터 구축 타당성 분석 용역 착수보고회를 여는 등 연구 시설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고교와의 협업 등 교육 분야에서의 지역 상 생 목소리도 나온다. 일레로 전남도교육청은 한전 공대 개교를 염두에 두고 나주시 금천면에 있는 전 남과학고를 한전공대 인근(빛가람혁신도시)으로 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공대와의 연 계 수업·연구시설 활용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력과 꿈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으나 이설 추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논란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

서 최소한의 지역 인재 배려(지역인재 전형)가 필 요하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학교가 전남에 위치한 데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나주시와 전남도가 10년에 걸쳐 모두 2000억원의 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학 캠퍼스도 지자체의 설득을 거쳐 마련됐다는 점 등을 감안한 주장이다. 한전공대와 유사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일 정 부분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하고 있 지만, 현재 한전공대 측은 지역인재 전형 도입 계획 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추진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에서 지역 특례 입학 가 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저희 초안 에는 학부 신입생은 100명이다. 100% 수시로 학생 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정원 외로 10% 범위에서 고른기회 균형 전형은 있으나 지역인재 전형은 없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시장 1억원 늘고 김영록 지사 3억원 줄어 부동산 투기 의혹 양향자 37억 국회의원 중 최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동현 도의원 부동산만 73억원

이용섭 광주시장은 고향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인과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에 아파트 1채를 보유 한 것을 제외하면 소유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광주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대부분 상속 등 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고향에 땅이 있었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현황을 보면 이 시장은 지난해 10억원에서 1억600만원 늘 어난 11억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는 고 향인 함평의 논과 임야를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5100만원(실거래 가격)이다. 건물은 서울과 광주 (전세)에 아파트 1채씩, 함평에 단독주택 1채를 신 고했다. 가액은 11억3900만원이다. 이 시장은 함 평 토지와 주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김 지사는 지난해 18억700만원에서 3억7100만 원 줄어든 1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까지 재산 내역을 공개했던 장남은 동립생계를 유지한다 고 고지를 거부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1억4400만원이 늘어 난 4억5500만원을 신고했다.

시의원 중에서는 임미란 의원이 최고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35억5000만원이 증가 한 82억8100만원을 신고했다. 임 의원은 예금 20 억4700만원, 증권 64억200만원을 신고했다. 비상 장·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증권 재산이 지난해 보다 38억6200만원 늘었다. 배우자 고향인 순천과 보성에는 88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었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난해보다 5400만원 증가한 1억6500만원을 신고했다. 전남도의회 최고 자산가는 이동현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배우자와 장남과 함께 고흥, 보성, 순 천 등지에 모두 55억5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 유했다고 신고했다. 또한 벌교읍 소재 상가, 아파 트, 순천 건물, 아파트 등 가족 명의로 모두 18억 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73억원을 웃도는 부동산에 예금을 포함, 모두 78억원을 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7400만원 늘어난 9억 5100만원을 신고했다. 보성에 400만원 상당의 토 지가 있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지난해보다 1500만원 증가한 2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37억9262만원을 신고했 다. 반면, 해군 군수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윤재갑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3875만원으로 가장 적

광주 지역구는 윤영덕(동남갑) 의원 1억4520만 원, 이병훈(동남을) 의원 28억4722만원, 송갑석 (서구갑) 의원 1억1642만원, 조오섭(북구갑) 의 원 2억4116만원, 이형석(북구을) 의원 3억6311만 원, 이용빈(북구갑) 의원 15억3295만원, 민형배 (광산을) 의원 12억9377만원이었다.

전남지역구는 김원이(목포) 의원 10억564만원, 주철현(여수갑) 의원 23억3526만원, 김회재(여수 을) 의원 49억3487만원,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 례갑) 의원 35억1559만원, 서동용(순천광양곡성 구레을) 의원 5억9444만,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2억9954만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13억 1211만원,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29억 3631만원,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5억 885만원 이었다.

/최권일·오광록·김형호 기자 cki@kwangju.co.kr



2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묘비에 손을 얹은 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김종인 위원장 광주 방문 왜?

호남 출향인 표심 구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24일 광주 방문 배경에 지역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 시작일을 앞둔데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를 승리한 뒤 첫 공식일정인 만큼 김 위원장의 이날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가 한창이던 이번 주 초 일찌감치 광주 방문 일정을 확 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단 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예상하고, 사실상 첫 선거 일 정으로 광주 방문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서울과 부산에 많이 사는 호남 출향민 의 표심을 노린 전략적 행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 역시 정치권에선 호남 출신으로 분류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권의 텃밭이자, 더불어민주 당의 심장인 광주를 직접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를 참배하고, 5·18 단체들과 간담회, 이용섭 광주 시장과의 만남 등 짧은 시간 광폭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에 사는 호남 출신이 500만 명"이라며 "이들 표심이 재 보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본인도 앞서 "서울시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호남 지역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며 야권이 선거 참패의 고리를 끊으려면 호 남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후보 역시 김 위원장의 기조에 발맞춰 당내 경 선 도중인 지난 2월 말 서울 호남향우회의 지지를 이끌어내 지역 확장성을 부각했다. 따라서 김 위원 장의 이날 방문도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 호 남 구애로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포함했고, 여야 합의로 5·18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물밑 역할을 했다.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실증 062)531-3530, H .010-9229-3530

